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최 원 상*, 신 진**

요 약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 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 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lliance Policy

Choi, Won Sang*, Shin, Jin**

ABSTRACT

For the past 66 years, the Korea-U.S. alliance has been a typical asymmetric alliance in which the U.S. supports South Korea's security during the Cold War and South Korea gives some of its policy autonomy to the U.S. But Lee Myung-bak government military alliance the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the character, 'value of alliance', Park Geun-hye ' a global, 'Frontier of cooperation', the government.'reciprocal, comprehensive alliance' Moon Jae-in, the government and partnerships developed with ' euroi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s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build a reciprocal and comprehensive Korea-U.S. allian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policy in order to ensure South Korea's policy autonomy following changes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alliance polic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e need for Korea to participate in the U.S.-led 'India-Pacific Strategy' continue diplomatic efforts for the mutual economic benefits of the two countries and strengthen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build the Korea-U.S. alliance in a reciprocal and comprehensive manner.

Key words : Korea-U.S. alliance, Asymmetric alliance, Theory of security-self-reliance exchange

접수일(2019년 8월 1일), 게재확정일(2019년 9월 21일)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주저자)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신저자)

1. 서론

지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이후 66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겪어왔으나 상호간의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와의 최초 정상회담부터 2019년 7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모두 71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가치의 공유와 상호신뢰를 토대로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2008년에 미국과 합의하여 ‘가치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새롭게 발전된 형태의 동맹관계를 지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동안의 한미동맹관계를 심화시킨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평화유지, 사이버 안보, WMD 비확산, 기후변화, 에너지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9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등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1,2].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안보관계뿐 아니라 경제관계도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간 지역패권 경쟁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및 경제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강하게 요구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동맹 정책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에 적합한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한미동맹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

하여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 구축을 통한 정책적 자율성 향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동맹 이론과 안보-자율성 교환이론을 통하여 비대칭 동맹의 성격을 분석하여 미국의 동맹정책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및 경제 정책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변화를 분석한 후,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2.1 비대칭 동맹의 개념과 형성 요인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동맹을 다국적 국제체제에서 작용하는 세력균형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으로 보았다. 스나이더는 구성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군사적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사적 공동행동을 설정한 관계를 동맹이라고 하였다. 왈트(Stephen M. Walt)는 동맹을 두 개 이상의 국가 간 안보적 협력을 위한 협정이라고 하였다. 즉, 동맹이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구성국 간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며, 동맹 국가 간의 안보적 협력을 지속하여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4,5,6].

모로우(James D. Morrow)는 인구, 영토, 군사력 등을 중심으로 국가의 형태를 국력의 크기에 따라 약소국,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구분한 후 동일한 국력의 국가 간 동맹관계를 대칭적 동맹관계로, 동일하지 않은 국력의 국가 간 동맹관계를 비대칭적 동맹관계로 설명하였다[7].

현실주의론자들에 의하면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의 행위를 통제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의 군사력을 지원 받는 전략으로서 동맹을 선택한다[8].

그러나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동등한 수준으로 상호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제한되어 비대칭적인 동맹관계가 되기 쉽다. 즉, 약소국은 자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강대국의 군사력을 지원 받는 대가로 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동맹 딜레마’가 발생하여, 약소국과 강대국이 맺은 동맹관계에서 안보와 자율성의 상관성이 발생하는 동맹관계를 비대칭 동맹이라고 한다. 즉,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약소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다[9,10].

각 국가가 상호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면 동맹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맹 해제 시 구성국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즉, 동맹을 통해 안전 보장이라는 이익이 더 큰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동맹 종속성이 높고, 이러한 높은 동맹의 종속성이 비대칭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11].

동맹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가간의 이해와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력이 균형되지 않아 비대칭적 동맹이 될 수 있다. 국가 간 동맹관계가 형성 될 때에는 국가 간 국력의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력이 비슷한 국가 간 맺어지는 대칭적 동맹은 상호 의무와 기대가 균등하고, 국력의 차이가 큰 국가 간의 비대칭적 동맹은 상호 다른 의무와 기대를 가지게 된다. 또한 비대칭적 동맹은 국익과 동맹비용 간의 차이가 불균형적이며, 동맹 조약의 내용과 다르게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의 국익에 따라 상대국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적 성향을 갖는다[12].

2.2 안보-자율성 교환이론

안보-자율성 교환모델은 후견-피후견 관계이론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존하여 안보적 이익이 증대할수록 약소국의 정책적 자율성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로우는 안보와 자율성은 반비례의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안보환경, 동맹국의 능력, 위협의 수준 등이 변함에 따라 모로우의 주장과 다르게 약소국은 자국의 안보 능력의 감소가 없이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한다. 즉, 자율성을 확보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안보 능

력의 감소를 스스로 보완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향상된 국가는 비대칭 동맹관계에서도 안보와 자율성을 동시에 증가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맹 딜레마의 극복을 위하여 약소국은 안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동맹체결국 상호간에 동맹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면 동맹관계는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안보-자율성 이론으로 볼 때, 냉전시기와 달리 한국의 대내외적으로 많은 안보환경이 변화하였지만 그에 비하여 자율성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이유가 탈냉전시기에도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특히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향후 한미동맹관계에서도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13].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동맹 체결국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한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이익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강대국과 약소국으로서 체결된 동맹이기에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이라는 주장도 있다[14,15,16].

2.3 분석의 틀

한미동맹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동맹의 호혜성을 높이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하기 위해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한미동맹에서 호혜적 동맹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전작권전통제권전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등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현안의 해결을, 포괄적 동맹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환경·식량·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아우르는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1>과 같이 탈냉전시기의 포괄 안보시대에 부합하는 동맹형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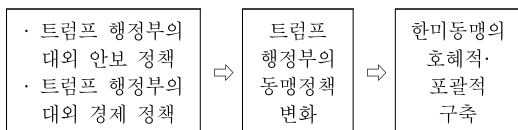
<표 1> 안보환경 변화 비교[17,18]

구 분	냉전시기	탈냉전시기
안보의 개념	군사 안보 (전통적 안보)	포괄적 안보 (전통적 안보 + 비전통적 안보)
동맹협력 영역	군사 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 (글로벌 파트너십)
미국의 동맹체결 및 유지 요인	신뢰(가치)	(경제적) 이익
미국의 군사전략	위협 중심 (적극적 개입)	역량 중심 (선택적 개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외교·안보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보장 등 동맹 공약을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정치적·경제적 대립 상황이 증대되고 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의 어려움이 있다.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남북미의 복잡한 3각 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일방주의,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19,20].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서로의 국익을 위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한미 양국의 안보 및 경제적 상황은 동맹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 일본, 중국 등 역내 강대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및 경제 정책을 분석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일동맹과 미중동맹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살펴 본 후,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통한 한국의 안보역량 과 정책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표 2>와 같은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표 2> 분석의 틀



3.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2019년 일본 오사카 G20정상회의와 관문점에서의 남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행정부들과 가장 다르게 보여준 것 중 하나가 미국의 동맹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및 경제 정책은 동맹관계 악화의 요인이 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행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들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1].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동맹국들이 미국에게 안보를 보장 받고 있으므로 미군의 재건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자주 했으며, 취임사에서는 ‘동맹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상하여 국익을 최대화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심지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관련국가인 인도와는 무역협상을 하였고, 일본에게는 미일안보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한국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19년도의 한미방위비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2% 증액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2020년도 분담금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22,23,24].

3.1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안보정책에 적용되는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표출된 것이다. 다자무역협정을 미국에 대한 ‘잠재적 제약’이라고 평가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당선 직후 탈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5].

둘째, ‘힘을 통한 평화’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자칫 낭비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분쟁 개입이 아닌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 안보 문제에 ‘전략적 인내’를 통한 선별적 개입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군사력의 선별적 운용이다. 2017년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폭격을 감행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의 국익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초를 보여 주는 것이다.

김준형에 의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른바 ‘샌프란시스코체제’라고 불리는 냉전적 동맹네트워크의 부활을 통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을 통한 대중중제 또는 봉쇄는 미국의 우선 전략이다[26].

미국은 9·11테러사건으로 안보 개념을 분명하게 하며 대외정책을 안보와 군사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군사주의로의 복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중추로 삼았으며,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미국의 의도를 거의 수용하였다.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은 향후 국제정세의 핵심을 중국의 굴기에 의한 세력전이의 국면으로 인지하였고, 이러한 미국에 대해 일본은 적극적으로 비용과 역할을 분담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총리는 페트릭 새너한 미국방부장관 대행과 면담하며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令和)의 시대에도 미일동맹의 역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한층 더 연대를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하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27].

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이라는 제목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지난 2017년 11월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밝히면서 미국의 주요 외교 및 국방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미 국방부가 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받는 위협 인식에 기초한다.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위협은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간 4자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여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원의원들은 NATO회원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도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무기통제수출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

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인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까지 하였다[28].

설인효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전략’을 잇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지역 전략이자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도-태평양’이란 지리적 개념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중심의 아시아에 부속된 인도’가 아니라 ‘인도를 핵심 또는 양 축 중 하나에 놓는 지리적 개념’이라는 것이다[29].

박인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아시아 지역 전략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중국이 일대일로상의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여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도와 호주를 양대 축으로 연결하는 지역전략은 안보는 물론 경제 협력 네트워크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전략권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국익에 기초하는 미래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의 무역 적자를 최소화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당선 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무역불균형의 해소 촉구와 관세정책을 적용하고 있다[30].

또한 미국의 국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소수의 이익집단과 정치가들의 이해관계로 원하지 않는 무역협정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국제무역은 미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증가를 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시대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미국에 호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였고,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강조하였으며, 한국과의 무역도 미국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오바마 행정부 때 재협상했던 한미 FTA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하였다. 이에 한미는 2017년 8월에 FTA 재협상을 하여 한국이 양보하는 내용으로 2018년 3월에 마무리하였다. 또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시 일본의 대미 수출을 가리켜 ‘미국에 아주 불공정한 상황’ 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3월에도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 며 제차 압박하였다[31].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조사를 통한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보복 관세 부과와 수입되는 물품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세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32,33].

또한 통신장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강조하며 불참시에는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어렵고 정보 공유도 하지 않겠다며 화웨이 장비 사용 중지 및 거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사드(THAAD)로 말미암은 중국의 경제 제재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재발 할 수 있기에 선불리 선택 할 수 없는 상황이다[34,35].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중국은 첨단 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자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대미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미 상무부는 화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국들과 전략적 공조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하여 공조하고자하는 방침을 세웠다[36].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중 한 가지는 상대국들이 자국의 화폐가치를 고의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환율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자국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낮춰 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려 준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제 단순히 관세문제가 아닌 미래의 패권경쟁이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외무역적자 축소와 일자리 증가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2019년 4월에 실업율을 반세기만

의 최저치라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트위터에 올리며 성과 홍보에 나섰다. 이는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2020년 재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37].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하여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기업 숫자도 급격히 늘었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여개 기업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다시 떠오르는 주요 배경이다[38].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경제질서라는 공공재 제공이 미국의 경제회복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한다. 즉,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정책 또는 미국에게 유리한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것이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 이후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부여하지 않고, 화웨이 제품의 구입도 가능하다고 하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휴전을 갖고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는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해온 보호주의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전략적 계산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행해질 것이다.다[39].

4.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변화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최근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의 유형과 외연을 확대하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지난 2001년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중심 접근법에서 역량중심 접근법으로의 국방전략 전환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냉전기에는 미국이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했지만, 탈냉전기에는 미국의 안보위협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냉전기에 전 세계에 배치된 영구 주둔지로부터의 원정작전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냉전기 ‘위협중심’ 군사전략으로부터 탈냉전기 안보환경 변화

에 대응하는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시(G. W. Bush) 행정부의 신군사독트린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역시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5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군사전략’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처음 표현되었다. 이는 미국은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미국 차원에서 위협중심 군사전략에서 역량중심 군사전략으로의 전환을 통한 동맹국가간의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즉 과거 위협중심 군사전략은 냉전기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위치한 지역 내에서의 고정된 위협에만 대응하며 역내 미국의 작전수행을 위한 지리적 공간을 제공한 반면, 탈냉전기 미국의 동맹국들은 역량중심 접근법에 따라 스스로의 안보강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상호방어조약에 명시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 안보현안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맹 협력의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 관련 백악관보고서(2015)’에도 미국은 역내 파트너 역량을 활용해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재난구호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구체화 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2015년에 미국과 일본은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면서 미일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을 선언하고, 군사동맹으로부터 기후변화, 빈곤퇴치, 우주탐사 등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 역시 2011년 이후 개발협력과 평화유지 활동, 사이버안보에 이르는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한미 양국은 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위협에 양상, 그리고 국가안보 이익의 양상은 호혜적·포괄적 동맹관계 형성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일동맹과 미호동맹의 변화와 발전과정은 한국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공통적으로 미국과 포괄적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군사분야에 주로 국한된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비군사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포괄안보의 개념 하에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미국과 일본, 호주의 동맹 구축과 변화가 주는 함의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모습을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4.1 미일동맹의 변화

1952년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출범한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동맹의 결속력 강화와 양국 간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1978년, 1997년, 2015년 세 차례의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쌍무적 군사동맹 관계에서 비전통 영역으로까지 포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국제문제에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 하에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제한을 둔 헌법 제9조에 대해 재해석을 하여 ‘보통국가’라는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다[4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같은 것에 기인한다. 우선 미국은 미일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높여 최근 국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냉전기 쌍무적 동맹관계에서 시작된 미일동맹은 탈냉전기를 맞아 일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2013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2004년 일본국제포럼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능동적 평화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안보노선의 일환으로서 아베 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일본의 정책적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41].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

화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15년 지침에는 미일 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방위협력과 지침의 목적, 평시 협력 조치, 외부세력에 의한 무력공격 시 대처방안,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2].

이는 미일동맹의 지리적 작전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미일동맹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각종 사태에 대해 대응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미일동맹이 쌍무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동맹 차원이었다면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발표 이후의 미일동맹은 글로벌 동맹으로 전환되고 일본의 역할도 확대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안보 및 외교정책 기조로 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국제질서안정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일 양국은 ‘중국견제’라는 공동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대화 신설에 합의하고, 북한의 핵 문제도 공동대응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같은 해 5월 시칠리아에서 개최된 주요 국가 정상회의에서는 양자 회담을 통해 미일동맹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되었다[43].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정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에게 위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분쟁, 북한의 군사도발 등에 대하여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군사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동 표명을 통해 동맹 네트워크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안보조약이 불평등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국은 우선순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44].

4.2 미호동맹의 변화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를 포함한 인도양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한 결과이다. 성공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와 호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와 안보 협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해양으로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주가 적극 참가하는 이유는 미국과 해양에서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호주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호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홍콩, 미국 순이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호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및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

호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안보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호주의 경제정책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내 안정적인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에는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경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익이 없고,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관련법을 제정하고, 토지의 외국인 구매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남태평양의 국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자 해당 국가들의 채무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호주는 관련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호주 모리슨 총리는

2018년 8월에 태평양 국가들에 대하여 호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관련 국가들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남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45].

미호동맹은 특정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라는 전통적 동맹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 질서의 유지 및 전향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미호동맹의 범주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점차 동남아, 동아시아, 아·태지역, 인도-태평양 및 범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호주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양국 ‘국방 및 외교장관의 2+2 회담’의 공동선언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동 선언문에서 양국은 매년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제반 이슈에 대한 양국의 공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 다윈 지역 미 해병대 순환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비용 분담 등 미국과 호주가 해결해야 할 동맹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은 미호동맹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호동맹 유지·발전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과 호주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무역, 항해의 자유, 법치주의 등이 내재된 미국 주도 경제 및 안보 질서의 유지이다.

반면에 양국이 미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최대의 장애는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이다. 중국은 미호동맹을 위시하여 동맹 간의 소다자적 연계가 추구되는 미국 주도의 동맹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동맹의 목적으로 인식해서 미국 주도의 동맹 강화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미일 동맹과 미호동맹의 연계를 비난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이 ‘3자 전략대화’를 인도가 포함되는 ‘4자 전략대화’로 확대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소규모 나토(little NATO)’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를 통한 소다자안보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5. 결 론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관계에 따른 안보와 자율성의 정도는 국내·외 안보 환경에 따라 변한다. 위협에

대한 인식, 신뢰성의 변화, 국내정치의 변화 등에 따라 동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한미관계도 한국의 국력 증진에 따라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멀지 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동등한 동맹관계를 갖고자 전시작전권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남북한 주도의 군비제한 및 군축 추진과 신남방 정책에 따른 베트남 등과의 교류 확대[46,47]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자 하고, 한미관계도 이전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국의 동맹유지 필요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지속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자율성을 양보하는 형태의 비대칭적 동맹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도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추진할 수 있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중 간 패권전쟁으로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하며 외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통상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외에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협력 파트너 확보를 통한 외교의 다변화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리비아식 해결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48]. 트럼프 행정부는 북

한을 강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대북정책 기조가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대외 안보 및 경제 정책 공약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대응을 하되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외교 안보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공공외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정부의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은 호혜적·포괄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맹정책을 펼치기에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책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보 및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미 양국은 상호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동맹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미래 설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중견국으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 비대칭동맹에서 좀 더 자율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안보와 자율성이 모두 향상되어 한미 양국은 호혜적·포괄적 동맹관계가 구축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최병욱·임유신, “한미동맹의 영향요인과 발전방향”, 신아세아, 제25권, 제1호, p. 93, 2018(봄).
- [2]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2018.
- [3] Morgenthau, J. Hans,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Alfred A. Knoff, 1973.
- [4] Snyder, H. Glenn,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p. 104, 1990.
- [5] Walt, M. Stephen, *The Origins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p. 12, 1987.
- [6] 백성호, “비대칭 안보동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0집, p. 196, 2003.
- [7] Morrow, D.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p. 906-907, 1991.
- [8] 미카엘 한텔 지음, 김진호 옮김, ‘약소국생존론’, 대왕사, 1995.
- [9] 이우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발전방향”, *정치정보연구*, 제19권, 제1호, pp. 52-53, 2016.
- [10] 한용섭, ‘동맹 속에서의 자주국방: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한용섭(편), ‘자주나 동맹이나: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오름, 2004.
- [11] Snyder, H. Glenn,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p. 472, 1984.
- [12] 이수형,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방안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3호, p. 383, 2000.
- [13] 장노순,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제1호, pp. 79-104, 1996.
- [14]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연경문화사, 2004.
- [15] 강봉구, ‘차가워진 피: 21세기 한미동맹정치 시

- 론', 이수훈(편),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 [16] 박민형,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형성 요인과 극복 전략",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p. 126, 2010(가을).
- [17] 김열수·김경규, "트럼프 시대의 한미 군사쟁점과 대응방향", 신아세아, 제24권, 제1호, pp. 31-34, 2017.
- [18] 박진수, "이익인가, 신뢰인가?: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적 함의", 동서연구, 제29권, 제4호, pp. 169-175, 2017.
- [19] 이명철, "한·미 동맹의 발전적 조정을 위한 제안", 주간국방논단, 제1689호, p. 2, 2017.
- [20] 김성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방향", 신아세아, 제24권, 제1호, p. 12, 2017.
- [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30046351001?input=1195m>.
- [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056500009?section=search>.
- [2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K14USHK>.
- [24] 국회뉴스ON,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4/05/2ce43dd9-935--434b-9321-ae72888288ab.html>.
- [2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72158005&code=970201.
- [26] 김준형, "한미동맹에서 한미관계로", 창작과 비평, 제46권, 제1집, p. 64, 2018.
- [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4093600073?input=1195m>.
- [28]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620/1/BBSMSTR_000000100002/view.doopengnb.
- [29] 설인호,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 방향과 시사점", 국방논단, 제1740호, p. 2, 2019.
- [30] 안문석,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4호, p. 76, 2018.
- [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47300009?section=search>.
- [3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047900009?section=search>.
- [3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2584&code=11141400&cp=du>.
- [34]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401073911000003>.
- [35] 신진, "한국정부의 대중국외교에 대한 전망이론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p.149, 2018.
- [36]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493>.
- [3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40030367034?did=DA&dtype=&dtypecode=&prn_ewsid=.
- [38]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22523360&mediaCodeNo=257&OutLnkChk=Y>.
- [3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10686#none>.
- [40] 한의석,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치논총, 제57권, 제3호, p. 496, 2017.
- [41]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분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pp. 185-187, 2018.
- [42] 이인호, "아베정부의 우경화와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동아연구, 제34권, 제2호, p. 92, 2015.
- [43]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13/95969485/1>.
- [44]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277>.
- [45] 임경한,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인도와 호주의 대응", 동아연구, 제30권, 제4호, p. 22, 2018.
- [46] 이표규, "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2호, p. 153, 2019.
- [47] 한승조, 신진,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정책 평가와 전망",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pp. 120-121, 2018.
- [48] 이강경, "韓·베트남 군사협력 추진전략: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3호, p. 108, 2018.

————— [저자소개] —————



최 원 상 (Choi, Won Sang)
1994년 2월 충남대학교 학사
2006년 8월 한성대학교 석사
現, 충남대학교 박사과정(군사학)
행정안전부 비상계획전문경력관
email : cws0314@korea.kr



신 진 (Shin, Jin)
1981년 2월 성균관대학교 학사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석사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박사
現,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 jinshin@cnu.ac.kr